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농어촌체험관광 등급제 도입

거시경제 동향

201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기획 정보

농업용 및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 본 자료는 2013년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식품부, 농업인 직업성 질환 조사연구 본격 착수」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농업안전보건센터의 개요

○ [정의]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병원, 의과대학, 연구소 등에 지정하여 운영 지원 하는 기관으로,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 건강문제 조사, 농어업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

○ [기능]

- 센터 내방 및 외방 농작업 질환자에 대한 등록 관리
- 농작업 질환 관련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
- 농작업 질환 현장 예방교육 및 홍보
- 권역 내 센터와 농진청(기술센터), 보건소 등과 파트너십 구축

○ [국외사례] 미국 NIOSH 산하 10개소, 핀란드 FIOH 산하 1개소, 캐나다 CCHSA 1개소 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외국사례>

구 분	미 국	핀란드	캐나다
	농업안전보건센터	국립농업보건센터	농업건강안전센터
기관조직	•NIOSH 산하 10개소	•FIOH 산하 1개소	•CCHSA 1개소
연구인력	•개소 당 20~40여명	•20여명	•20~30여명
기술수준	•감시, 예방기술 적용	•예방효과 구명단계	•학제 간 연계 및 학문적 접근
주요기능	- 농업 노동자와 그 가족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농작업 관련 질병과 상해 연구 - 치료 목적이 아닌 예방 교육, 작업 관리를 통한 산업 재해 예방 수행	- 농업인 건강서비스 효율성 제고 및 수혜 확대 지원 - 홍보와 훈련 - 4년 주기 안전 점검 받은 농가는 재해 보험의 20% 감면 - 농작업사고 예방 캠페인 운영	- 농촌지역(오지 포함) 농업인 건강과 복지 조사 교육 및 건강 증진 PG 작성설계 도움을 위한 지식 공유 - 국가적 연구 수행 - 호흡 음식 환경 작업 건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주요내용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4.3일 농업인 직업성 질환의 조사·연구 및 예방 교육을 담당할 농업안전보건센터 **5개소 지정(3.27)** 및 **지정서 수여**
 - (지정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한양대산학협력단,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산학협력단, 경상대병원 등 5개소
- [운영계획] 호흡기 질환, 고온·일광 자외선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 농업인에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농업인 직업성 질환(농부증*으로 통칭)에 대해 센터별로 연구주제를 정해 조사·연구 착수
 - ※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신체적 장애 증후군
 - ※ 농어업종사자의 만성질환의 연간 유병률: 근골격계(65.51%), 소화기계(17.86%), 순환기계(18.15%), 내분비/혈액(7.96%), 구강(7.20%)
- (연구활용) 농업인의 농작업과 주요 질환과의 연관성 등 규명,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등 실시 ⇒ **농업인의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
- (추가계획) 이번에 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 기존 센터의 연구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운영

<농업안전보건센터별 연구주제 현황>

지정기관	연구주제
경기농업안전보건센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인 호흡기 질환
강원농업안전보건센터 (강원대학교병원)	• 농업인의 작업기인 질환의 분석 및 예방사업
충북농업안전보건센터 (충북대학교병원)	• 농업인 일광·자외선 노출질환
전남농업안전보건센터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 농업인 무릎관절염 질환
경남농업안전보건센터 (경상대학교병원)	• 과수 등 농업인 상지 근골격계 질환

주요 농정 이슈 2

농어촌체험관광 등급제 도입

※ 본 자료는 2013년 4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어촌체험관광, 이제 등급보고 고르세요!」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등급제 도입 개요

- [개념] **농어촌관광사업(농어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에 대해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의 품질을 평가하여 등급 부여**
- [목적] i) 관광객들에게 체험마을 선택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 제공**,
ii) 체험마을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설 및 서비스 질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농어촌관광 활성화**
- [등급 결정기관]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자원개발원)
- [등급]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에 대해 각 부문별 등급 (1~3등급) 부여
 - (평가기준) 부문별 만점 기준 90%이상 1등급, 80%이상 2등급, 70%이상 3등급 부여, 70%미만은 등급을 부여하지 않음.

<등급결정 평가기준>

등급결정 대상	합 계	등급결정 부문별 평가항목 및 배점			
		경관 및 서비스	체 험	숙 박	음 식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70항목/298점	10/80	20/80	24/76	16/62
관광농원사업	66항목/267점	10/72	16/56	24/76	16/63
농어촌민박사업	31항목/136점	7/58점	-	24/78점	-

- [등급부여절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부문별 70여개 항목을 평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결정기관이 최종 결정
- [등급 유효기간] 2년(등급결정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지원내용] 2등급 이상을 받을 시 운영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표창,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대중매체 홍보 등 지원

○ [기대효과]

- (소비자) 객관적인 등급정보 제공, 농어촌관광 신뢰성·만족도 향상
- (사업자) 품질개선 노력 유도, 차별화 및 홍보효과로 수익증대
- (파급효과) 우리나라 농어촌관광상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국내·외 관광객을 농어촌으로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

□ 등급제 국외 사례

○ 프랑스: 지트(Gites, 농가민박)

- 1954년 관련법이 제정되어 등급화 시작, 6개의 관광서비스 유형별 품질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등급평가
- 5개 부문에 3~5단계로 등급평가

○ 영국: 팜스테이(Farm stay, 농가민박)

- 농촌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등급화가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방 정부에서 등급 의무화 추진
- 7개 부문에 5단계로 등급평가

□ 추진사항

-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호)」 제정, 등급 결정기관을 한국농어촌공사로 지정하는 등 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
- 시행 초기인 올해는 원활한 정착을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100여 곳)을 중심으로 우선 시행**
 - 관광농원과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적용 확대
 - ※ 등급결정 대상: 농어촌체험휴양마을(700개소), 관광농원(465개소), 농어촌민박(21,971개소)

거시경제 동향

201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 본 자료는 2013년 4월 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3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전반적 동향

○ [13.3월 소비자물가지수] 107.4(2010년=100),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3% ↑

<연도별 3월 및 월별 소비자물가 동향(2010=100, %)>

구 분	연도별 3월 동향					최근의 월별 동향						
	2009	2010	2011	2012	2013	'12.9	10	11	12	'13.1	2	3
지 수	96.8	99.2	103.3	106.0	107.4	107.0	106.9	106.5	106.7	107.3	107.6	107.4
전 월 비	0.7	0.2	0.4	-0.1	-0.2	0.7	-0.1	-0.4	0.2	0.6	0.3	-0.2
전년동월비	3.9	2.5	4.1	2.6	1.3	2.0	2.1	1.6	1.4	1.5	1.4	1.3
전년동기비	3.9	3.0	3.8	3.0	1.4	2.3	2.3	2.2	2.2	1.5	1.5	1.4

○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105.9, 전월대비 0.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5% ↑

○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 105.1, 전월대비 0.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4% ↑

○ [생활물가지수] 106.9, 전월대비 0.4%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8% ↑

- (식품) 109.5, 전월대비 0.9% 하락(전년 동월대비 0.6% ↑)

- (식품이외) 105.8, 전월대비 0.2% 하락(전년 동월대비 0.8% ↑)

○ [신선식품지수] 117.1, 전월대비 2.7% 하락

※ 전년 동월대비 1.0% ↑

- (신선어개) 111.2, 전월대비 0.2% 상승(전년 동월과 동일)

- (신선채소) 114.4, 전월대비 7.9% 하락(전년 동월대비 19.3% ↑)

- (신선과실) 123.7, 전월대비 0.5% 상승(전년 동월대비 1.1% ↓)

- (기타신선식품) 111.0, 전월대비 1.6% 상승(전년 동월대비 3.6% ↑)

□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 [13.3월 농축수산물 물가지수] 113.2, 전월대비 2.2% 하락

※ 전년 동월대비 0.6% ↓

- (농산물) 122.9, 전월대비 2.7% 하락(전년 동월대비 1.0% ↑)
- (축산물) 93.9, 전월대비 2.7% 하락(전년 동월대비 5.9% ↓)
- (수산물) 113.2, 전월대비 0.3% 상승(전년 동월대비 1.5% ↑)

<품목성질별 동향(2010=100, %)>

구 분	품목수	가중치	2012.3월				2013.3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2월)	지수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1~2월)
총 지 수	481	1000.0	106.0	-0.1	2.6	3.0	107.4	-0.2	1.3	1.4
농축수산물	71	77.6	113.9	1.6	3.0	2.3	113.2	-2.2	-0.6	1.6
농 산 물	51	43.5	121.7	2.8	9.4	6.6	122.9	-2.7	1.0	5.3
축 산 물	6	22.1	99.8	-0.8	-10.1	-6.2	93.9	-2.7	-5.9	-7.3
수 산 물	14	12.0	111.5	0.7	3.8	2.5	113.2	0.3	1.5	1.7

<2013년 3월 주요 농축산물 등락품목>

단위: %

구 분	전월대비	전년 동월대비
상승 품목	귤(14.0), 양파(12.9), 바나나(8.5), 닭고기(7.8), 배추(6.3)	양파(119.5), 배추(70.6), 당근(177.5), 파(49.1), 쌀(5.7), 사과(9.5)
하락 품목	오이(-27.3), 돼지고기(-5.8), 시금치(-36.8), 호박(-21.0), 딸기(-18.5), 쇠고기(국산)(-3.0)	돼지고기(-17.8), 귤(-26.5), 딸기(-33.7), 고춧가루(-16.0)

기획 정보

농업용 및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동향

※ 본 자료는 주요 언론내용과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하여 요약정리한 것임.

□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동향

1) 전기요금 인상 추이

- '12.8.6일 7년 만에 농업용 전기요금 중 병(丙)에 해당하는 요금 인상
- '12.11.1일 기존 요금체계인 갑·을·병 3단계가 2단계(갑·을)로 축소 개편
 - 바뀐 을(乙)은 기존 을보다 비싼 병 요금 적용
- '13.1.14일 농업용 전기요금 3%(용도별 4%) 인상
 -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심야전기도 5% 인상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구 분	기본요금(원/kW)			전력량요금(원/kWh)		
	갑	을	병	갑	을	병
'04.3.1	340	920	1,060	20.4	26.1	36.1
'05.12.8	340	930	1,070	20.6	26.3	36.4
'07.1.15~'12.1.1 (9차례 개편)	동결					
'12.8.6	340	930	1,100(저압), 1,120(고압)	20.6	26.3	37.3(저압), 38.0(고압)
'12.11.1	340	1,100(저압), 1,120(고압)		20.6	37.3(저압), 38.0(고압)	
'13.1.14	350	1,130(저압), 150(고압)		21.2	38.4(저압), 39.1(고압)	

- 주 1) 기본요금: 설비가용성 유지를 위한 설비투자비용과 고정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이며 계통 동시부하율, 중별 부하율,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
- 2) 전력량요금: 전기소비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단기변동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요금
- 3) 갑: 양곡 생산용 전력(양수기, 배수펌프 등)
- 4) 을: 육묘 또는 전조 재배용 전력
- 5) 병: 기타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용 전력, 농수산물 생산자의 농수산물 건조, 농작물 저온보관, 수협 또는 어촌계의 수산물 제빙, 냉동시설, 해충 구제용 및 유인용 전력에 사용

자료: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 기존 요금체계에서 올은 최근 2차례의 개편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저압인 경우 기본요금 21.5%, 전력량요금 41.8%, 고압인 경우 기본요금 23.7%, 전력량요금 48.7%씩** 각각 인상

- 육묘 또는 전조 재배용 전력을 사용하는 **화훼농가의 급격한 생산비 증가 우려**

2) 인상 원인

○ 기형적 에너지 과소비 구조

- '04년부터 10년간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기형적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변화
- 이는 유류인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사설이 선호**되었기 때문
- 특히, **농사용 전기료**는 다른 용도의 절반도 안 돼 비닐하우스 전기 난방 같은 **비정상적인 소비 행태**가 이루어짐.

○ 중장기 전기 수요 예측 실패

- 제때 발전소를 짓지 않아 동·하절기에 전력 공급이 부족하여 블랙아웃* 위기 경고 반복
 - ※ 전기 발전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아 도시나 넓은 지역의 전기가 동시에 모두 끊기는 최악의 정전 사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국가 및 산업 기능의 상당 부분이 마비되고 일부 산업시설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음.
- 적정 전력보유를 위해 전기료 인상을 통한 수요억제가 방안으로 제시

3) 농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한 여론

<국회예산정책처>

- 농림어업 분야에서 1차 에너지인 석유나 석탄에서 이를 원료로 쓰는 2차 에너지인 전기로 소비 급변화
- 농림어업의 석유류 비중은 ('02년) 80.8% → ('11년) 57.1%로 빠르게 감소 하는 반면, 전력 비중은 ('05년) 15.4% → ('11년) 35%로 2배 이상 증가
- 농사용 전기요금은 용도별 요금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적용하여 전기사용량은 국민소득 증가율보다 높은 5% 이상 증가, 농어업용은 이보다 더 큰 폭인 연평균 9.2% 증가

- 농어민들이 면세로 석유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선호 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편리성 때문

- 생명산업일 뿐 아니라 비교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농어민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을 갖고 있지만 지나치게 값싼 전기요금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해 방치 불가

- 더 이상 전기를 보조해주는 방식의 에너지 정책은 곤란하며, 전기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 유도가 시급한 실정

<농업인 여론>

- “추운 날씨와 경기 침체로 국내 꽃시장은 얼어붙고 수출마저 중단된 상태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는 것은 화훼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음.”<고양시 탁기호씨>

- “동절기에는 열 회수 환기장치 가동, 전조재배 등의 사용으로 전기료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와 부담이 큰 상황에서 또 전기료가 인상돼 답답할 따름”<창원시 변태안씨>

- “2중 터널에 수막만으로 갯잎을 재배하기 어려워 온풍기를 추가 설치해 가온 재배해야 할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또 오르면 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금산군 곽상연씨>

- “정부는 농업용 전기요금의 3.4%에 해당하는 ‘을’요금을 ‘병’으로 인상해 FTA체결로 상실감에 처해 있는 화훼농가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것임.”<이승용 한국화훼협 사무총장>

※ '11년 기준 화훼농가와 관련된 '을' 기준의 연 전기 판매액은 167억 원으로 농사용 전체 전기 판매액 4,899억 원의 3.4% 차지

- 화훼·갯잎 등의 전조재배는 난방 효과와 함께 일조량 부족에 따른 병충해 예방도 가능해 농산물 품질 향상을 위해 포기할 수 없으며, 육묘장의 전기료 폭등은 모종 가격 상승으로 그 피해가 일반 농가에 전가

- 비료·농약·사료·에너지 등에 들어가는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포함

<신동아 잡지의 전력산업 정책 여론조사 결과>

○ 전력 부족 사태는 잘못된 정부 정책 탓

- 최근 전력 부족 사태의 원인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 (34.2%)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전력 정책(53.4%) 탓에 야기된 문제라는 여론이 우세

○ 시장논리 도입(26.5%)보다 공공성 강화(63.9%) 필요

- 전력산업의 운영과 관련,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63.9%)이 “시장 논리를 도입해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26.5%)는 응답보다 우세

-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조사기간: 1월 8~9일
-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동향

1) 전기료 누진제 개편 동향

- **[개편배경]**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와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이유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
 - 전력사용량이 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등 주거환경이 변한 점도 누진제 단계가 축소된 이유
- **[해외사례]** 해외의 경우 미국 2단계(누진율 1.1배), 일본 3단계(1.4배), 대만 5단계(2.4배)이며,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은 단일요금 체계
- **[개편안]** 현행 6단계로 나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이르면 '13년 하반기(7~12월)부터 **3~5단계**로 축소
 - 상반기 중에 누진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
 - 지경부에서 내놓은 안은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6단계 11.7배에 이르는 누진제를 3~5단계로 조정, **1단계와 마지막 단계 요금의 차이도 4~8배 정도로 축소**

- 지경부, 현재 월 100kW 이하로 되어 있는 1단계 구간을 150~200kW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이에 따라 누진 1~3단계(50kWh~250kWh) 사용 가정은 421원~2,183원을 더 내야 하고 누진 4~6단계(350kWh~601kWh)를 쓰는 가정은 1,456원~3만3470원 요금을 덜 내게 됨.

-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소비 패턴 합리화 차원에서 연료비 연동제, 전압별 요금제, 시간대별 차등요금 등 원가 기반 요금제로의 전환 계획도 마련

<현행 6단계 기준 개편 후 요금 조정(안)>

구 분	누진제 개편 시 요금조정
누진 1단계 (50kWh)	1,984원 인상
누진 2단계 (150kWh)	421원 인상
누진 3단계 (250kWh)	2,183원 인상
누진 4단계 (350kWh)	1,456원 인하
누진 5단계 (450kWh)	3,223원 인하
누진 6단계 (601kWh)	33,470원 인하

2) 관련 논란

- **[전기요금 역차별 문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은 줄고 적게 사용하는 가정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로 개편함에 따라 논란 야기
 - 전기를 많이 쓸수록 높은 요금을 부과해 전기 사용을 억제한다는 당초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짐. 오히려 전기 소비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 가중
- **[저소득층 전기료 부담 가중]** 특히, 저소득층의 요금 인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주택용 전기요금 총수입은 고정시켜 두고 요금을 조정하면서 저소득층이나 전기를 적게 쓰는 낮은 누진제 대상자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
- **[농가 부담가중]**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편은 농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
 -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군 지역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99kWh*로 대다수 농가는 누진 1~3단계에 해당되어 주택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전망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에너지총조사보고서」

※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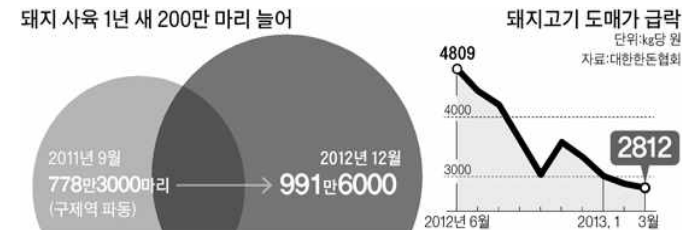
- 조세연구원_재정포럼_현안분석_임소영 「주택용 전기요금의 현황과 개편방향」 (2013.3)
- 아젠다넷_「전기료 누진세 개편 논란」 (2013.2)
- 농민신문_보도자료 「전기료 누진제 완화…농가부담 늘 듯」 (2013.2.18)
- 매일경제_보도자료 「[사설] 전기료 누진단계 줄이고 원가연동제 해보라」 (2013.2.15)
- 환경일보_보도자료 「전기요금, 수급조절 기능 회복해야」 (2013.2.15)
- 뉴스1_보도자료 「지경부, 단일요금제 도입 등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추진」 (2013.2.13)
- 동아일보_보도자료 「주택 전기요금 누진제 하반기부터 6단계-4단계 축소 추진」 (2013.2.13)
- SBS_보도자료 「전기요금 누진세 축소, 절약의식 고취 목표…“서민만 죽어나”」 (2013.2.13)
- YTN_보도자료 「전기료 누진세 개편 내용 보니…서민 부담 ‘가중’」 (2013.2.13)
- 원에산업신문_보도자료 「화훼농가 전기요금 인하 요구」 (2013.2.12)
- SBS_보도자료 「난방비 폭탄에 수출 어려움까지…화훼농민 ‘울상’」 (2013.2.5)
- 신동아_보도자료 「수요관리·발전·송배전, 한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2013.2. 641호 252-259)
- 농민신문_보도자료 「농사용 전기료 인상 철회」 (2013.1.30)
- KBS_보도자료 「농가 전기료 폭등, 집단 탄원 움직임」 (2013.1.22)
- 이투데이_보도자료 「농림어업 주력에너지 전환이 뜻하는 것」 (2013.1.21)
- 부산일보_보도자료 「농사용 전기요금 3% 인상 ‘영농비 부담’」 (2013.1.15)
- 문화일보_보도자료 「전수담 電力에 땀질식 정책,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2013.1.10)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 본 자료는 4월 1일~5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돼지 1마리당 12만 원 손해…더 이상 못 버텨”



- 포천·홍성 축산 단지 가보니 **7개월 사이 가구당 2억 적자**. 돼지 값이 지난해 9월부터 7개월째 하락하고 있어 전국 6,040개 양돈 농가 2011년 구제역 홍역을 치른 이후 2년 만에 다시 위기. ▲농민…**한·미 FTA 체결** 등으로 **수입육 물량 증가**, 2년 전 구제역으로 돼지 값이 뛰자 **수입업체 운송료 보조** 등 **정부 개입 등이 가격 폭락의 원인**. ▲지자체 관계자…구제역 이후 **무분별하게 사육 마릿수를 늘린 농가에도 책임**. ▲협회 측…전국 양돈 농가 피해액 가구당 평균 1억6,000만 원, 총 9,500억 원, **폭락 3개월 지속 땀 80% 도산**. ▲전문가…도매가는 연일 하락하는데 소매가는 거의 변동 없어 **정부의 과다 생산된 물량 구매 급속 추진과 왜곡된 가격 구조** 개선 지적, 삼겹살 등 인기 부위만 주로 찾는 **소비 패턴 전환 필요**

자료 : 중앙일보(2013.4.3)

□ 축산물 산지가격 내렸는데…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

- **축산물 산지 가격 부진**이 거듭되고 있는데 반해 **소비자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소비자시민모임·축산물품질평가원, '12.12.18~20일, '13.2.5~7일 2차례에 걸쳐 서울 등 7대 광역시와 경기 지역의 식육판매점 384개소, 음식점 139개소 등 총 523개 업소를 대상으로 쇠고기(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 조사 공동 실시한 결과 ▲**쇠고기**…지난해 12월에 비해 '13.2월 **도매단계**

한우 지육(1+등급) 가격 3.2%, 한우 등심(1+등급) 가격 6.8%씩 하락한 반면, 한우 등심(1+등급) 소비자 가격은 농협계통매장이 최대 4.9% 상승, 이어 백화점 3.7%, 슈퍼마켓 3.5%, 정육점 3.5%, 대형마트 3.2% 순. ▲돼지고기...13.2월 산지 가격이 '12.12월보다 16%, 도매 가격 14.7% 하락, 식육판매점의 삼겹살 소비자 가격은 1.5~6.5% 하락. ▲닭고기...도매 가격 6.8% 상승한 반면, 소비자 가격은 소매단계를 거치면서 최대 10.3% 상승, 소비자 가격 인상폭이 가장 큰 곳은 슈퍼마켓(10.3%), 다음으로 정육점 5.2%, 대형마트 4.2%, 농협계통매장 3.3%, 백화점 2.2% 순. ▲음식점 식육 100g당 가격표시제 70% 미시행. 산지 및 도매가격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합리적 가격 형성되도록 산지 및 도매, 소비자 가격 간의 연동성 문제 해결 필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4)

□ 정부 농산물 구매, '사전구매·상시비축'으로 전환

- 물가관계차관회의, 3.29일, 농산물 비축현황·향후 계획 등 논의...비축 기능 강화 모색, 사전구매·상시비축 등 물량 확보 방안 발표. ▲배추...사전·사후 구매 병행 → 사전구매 방식으로 전환. 정식 전 구매약정 체결, 사전물량 확보 방침, 올해 비축 목표는 가격 상승기 도매시장(가락시장) 출하량의 10%를 상회하는 수준인 1만1,000톤 수준. ▲고추, 마늘 등 국산 양념류...시가구매·계약구매 탄력적 운용, 국산 건고추 ('12년) 4,000톤 → ('13년) 6,000톤, 마늘 ('12년) 6,000톤 → ('13년) 9,000톤 증대 예정. ▲국산 콩...구매 확대를 위해 고정가격 구매 → 시가구매방식으로 변경, 특히 지난해 kg당 3,618원이라는 고정가격이 시가 6,000원보다 낮아 구매실적 전무, 올해 1만 톤 목표. ▲구매 농산물의 소비시장 도달 시간 단축으로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의 빠른 효과 도모...원물 농산물의 재포장 시간 단축을 위해 가공 및 소포장 농산물의 공급 확대, 수요상황에 따라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공급처의 신축적 조정 위해 공급경로 다양화 추진, ▲노후화된 비축기지의 현대화·광역화...40년 이상 된 지방의 8개 비축기지를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부경권 등 4개 권역으로 통합 이전 및 신축, 상시비축 확대에 대비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4)

□ 한·중·일 FTA 1차 협상 “농수산업 등 민감분야 최대한 보호”

- 3.26~28일, 한·중·일 FTA 1차 협상에서 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 보고서의 내용을 준거로 협상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향후 농어업 전반에 대한 협상도 함께 진행될 전망. 산업통상자원부, 3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상운영세칙 채택, 협상 범위 등 향후 협상 진행의 기초가 되는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 논의. ▲협상방식...상품협상, 서비스협상, 투자협상 등 모든 분야의 협상 동시 진행. ▲양허방식...상품분야는 양자협상과 3자 협상 병행, 서비스 투자와 규범 분야는 3자간 협상 원칙. ▲협상범위...3국간 산·관·학 공동연구보고서 내용을 준거로 하고 필요시 3국간 합의로 추가. ▲보고서...상품(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어업, 식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이 제시돼 농어업 전반에 대한 협상 진행. 한·중·일 FTA를 포함해 모든 FTA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 농수산업을 비롯해 우리의 민감분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호하고 필요한 대책 마련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1)

□ 중국 소비자, 국산 가공식품 만족도 높지만...

- 농촌진흥청, 3.28일, 중국 중산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발표. 중국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국내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 대한 구입 경험이 크게 엇갈려. ▲최근 한국 식품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34%, 미국(17.6%), 프랑스(16.4%), 일본(11.6%)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품목별...김치, 장류, 차·커피류, 면류, 유제품 순. 반면, ▲신선식품 구입...중국으로 공식 수출하는 품목이 거의 없어 구입 경험이 적고, 미국(44.4%), 태국(37%), 뉴질랜드(13.4%), 일본(8.6%) 순. ▲가공식품에 대한 만족도...5점 만점에 4.21점. ▲지불할 의향 가격...중국 농식품 대비 21.1% 정도만 더 지불할 의사를 밝혀 프랑스(41.6%)와 이탈리아(32.8%) 등 유럽보다 낮아 만족도에 비해 고급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함. 한·중FTA에 대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들의 마음을 얻는 적극적인 수출 전략 필요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1)

□ 순천 벼 재배농민 월급 받는다

- 순천시, 4.1일, 전국 최초로 벼 재배농가의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 시행. 6월~10월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8만~90만 원 수준으로 지급. ▲사업대상자...순천지역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로 농협과 자체수매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으로 한정. ▲신청방법...4월 말까지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농협 약정체결 사본 등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시청 친환경농축산과에 직접 또는 팩스 제출
※ 벼 수확이 끝난 뒤 농가에서 농협에 출하할 예상물량의 60%를 미리 자치 단체가 월급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3.4.4)

□ 소규모 축산농 축분 관리...환경부, 지도·점검 강화

- 환경부, 3.26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소규모 축산농가의 수는 많으나 이들의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의 14.2%에 불과해 그동안 가축분뇨 관리정책은 중·대규모 축사에 초점이 맞춰져 앞으로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

자료 : 농민신문(2013.4.1)

□ 육가공 산업, '웰빙' 코드로 소통...부알의 나래 편다

[한국 육가공산업 변천사]

- 1960년대...축육 햄과 축육 소시지 등은 소량 생산돼 특급호텔이나 일부 고급 소비처에 공급
- 1970년대...대중적인 육가공품 본격 생산, 상온유통이 가능한 어육혼합제품 생산되기 시작
- 1980년대...무균, 무진 포장실 등 위생적인 제조설비,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2개 제조업체간의 경쟁적 구도로 우리나라 육가공품 시장 급속팽창
- 1990년대...70~80년대 연평균 31%의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육가공품 시장은 돈가 상승에 따른 저급육의 대체사용으로 육가공 시장 침체기
- 2000년대...소포장 단위와 다양한 형태의 포장·고급화 본격 시도, 장기간 침체상태지만 다양한 제품 출시
※ 돼지고기 소비량의 15% 정도가 현재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이용돼 일본의 절반 수준
- 2008년 이후...외식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육가공업체는 가정용, 업소용, 단체급식용 등 제품 카테고리 다양화하면서 시장수요 꾸준히 확대
- 2012년...비선호 부위 등을 포함한 균형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식육 판매업자(정육점)가 즉석에서 식육가공품인 햄과 소시지 등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육가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다품목·고급화 제품 판매 확대로 업체의 경영성과 향상과 저지방 부위육 소비증대 기대

[통계로 보는 육가공 산업]

- 육가공품 소비와 생산현황
 - 국민 1인당 육가공품 소비량...('70년) 0.1kg → ('12년) 3.8kg
 - 육가공품의 생산량('12년)...햄 6만4천239톤, 소시지 5만6천469톤, 베이컨 5천856톤, 캔햄 3만8천205톤으로 전년대비 0.2% 증가
 - 소시지 수입...('00년) 3천765톤 → ('07년) 7천 톤 → ('11년) 7천989톤
 - 돈육캔 수입...('03년) 3천 톤 → ('08년) 5천349톤 → ('11년) 3천33톤
 - 소시지 수출...('05년) 1천313톤 → ('09년) 44톤 → ('10년) 218톤 → ('11년) 244톤
 - 캔햄 수출...('02년) 176톤 → ('08년) 1천178톤 → ('11년) 115톤
- 육가공 제품 트렌드
 - ('10년) CJ제일제당이 '더 건강한 햄을 출시한 이후, 농협목우촌 '순진무가', ('11년) 하림 '자연실록', ('13년) 롯데 로스팜 엔네이처 등 건강·웰빙을 주제로 한 상품 출시, 한편 에스푸드는 캠핑 열풍과 맞물려 그릴, 모듬소시지 출시

자료 : 축산신문(2013.4.3)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논벼(쌀) 생산비 조사결과

※ 본 자료는 2013년 3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논벼(쌀)생산비 주이

- **[10a당 논벼 생산비]** '08년, '09년 풍작으로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토지용역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년까지 생산비가 감소한 반면, **'11년부터** 쌀 생산량 감소로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
 - ('08년) 630천 원 → ('09년) 625 → ('10년) 614 → ('11년) 628 → ('12년) 713
- **[80kg당 쌀 생산비]** '08년, '09년 연이은 풍작으로 10a당 쌀 생산량이 증가하여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10a당 생산량 감소가 이어져 **증가 추세**
 - ('08년) 94천 원 → ('09년) 91 → ('10년) 98 → ('11년) 98 → ('12년) 117

□ 2012년산 논벼(쌀) 생산비

○ [10a당 논벼 생산비] 전년대비 13.4% 증가

- ('11년) 628,255원 → ('12년) 712,523원(13.4% ↑)
- (직접생산비) 농약비 등이 감소하였으나, 종묘비, 비료비, 노동비, 위탁영농비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1.3% 증가**
 - ※ 자가노동비: ('11년) 농촌임요금(시간당 6,640원) → ('12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5~29인의 제조, 건설, 운수업의 평균단가(시간당 13,096원) 적용으로 변경
 - ※ 자가노동비 종전기준 적용 시 생산비: ('11년) 628,255원 → ('12년) 638,040원 (1.6% ↑)
- (간접생산비)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임차료 지불 증가로 토지용역비가 늘어 전년대비 2.0% 증가

○ [80kg당 쌀 생산비] 전년대비 19.0% 증가

- 현백률 92.9% 적용: ('11년) 98,031원 → ('12년) 116,754원 (19.0% ↑)
- 조정 현백률 90.4% 적용: ('11년) 100,877원 → ('12년) 120,054원 (19.0% ↑)

<논벼(쌀) 생산비>

단위: 원, %

구 분	2011년	2012년	증 감	증감률
□ 10a당 논벼 생산비	628,255	712,523	84,268	13.4
○ 직접생산비	372,595	451,800	79,205	21.3
- 종 묘 비	14,080	15,243	1,163	8.3
- 비 료 비	42,664	44,339	1,675	3.9
- 농 약 비	28,607	25,706	-2,901	-10.1
- 기타재료비	12,956	13,507	551	4.3
- 영농광열비	6,738	6,583	-155	-2.3
- 농 구 비	47,896	47,688	-208	-0.4
- 노 동 비	97,960	174,611	76,651	78.2
- 위탁영농비	115,060	117,308	2,248	2.0
- 기 타*	6,632	6,815	183	2.8
○ 간접생산비	255,661	260,724	5,063	2.0
- 토지용역비	227,426	239,054	11,628	5.1
- 자본용역비	28,234	21,670	-6,564	-23.2
□ 10a당 부산물생산비	20,464	22,215	1,751	8.6
□ 80kg당 쌀 생산비	98,031 (100,877)	116,754 (120,054)	18,723 (19,177)	19.0 (19.0)
□ 10a당 쌀생산량(kg)	496 (482)	473 (460)	-23 (-22)	-4.6 (-4.6)

주 1) ()는 '11년부터 조정한 현백률 90.4% 적용치

2) * 기타는 영농시설비, 수리비, 조세 및 기타비용, 생산관리비

□ 10a당 논벼 생산비 구조

- **[재배규모별]** 직접생산비는 재배규모가 큰 농가일수록 감소, 간접생산비는 반대로 증가
 - 이는 기계화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농가는 위탁영농비가 적게 지불되나, 대규모 우량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지불 임차료가 높아 토지용역비가 증가 하는데 기인
- **[경영주 연령별]** 연령이 높을수록 생산비가 높게 나타나며, 특히 노동비, 위탁영농비 증가가 두드러짐.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